

‘어업인 보호’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피해 전남·경남에 집중...4명 중 1명 보상 못받아 고수온에 따른 청구건수 3년 새 7배 가까이 증가 문금주 “재해보험 개선하고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망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조피볼락·말쥐치·넙치 등 어류 및 멧게 등에서 522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남은 조피볼락 등 어류 및 전복, 굴 및 해조류, 새고막 등에서 202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충남 26억원, 경북 12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

정이다. 실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39.8%(2천936어가)에 불과하다. 2018년 44.3%(4천250어가) 수준의 가입률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가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요 원인으로는 재해보험이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80종의 양식수산물 중 28종에 불과하다. 품목별 가입률도 0~118.2%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재해보험의 성격상 1년 소멸성과 낮은

보상률도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어류양식 재해 보상 기준이 치어와 성어로만 구분돼 있어 1년을 넘겨 어류를 키웠어도 성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치어 수준의 보상만 받는 게 현실이다. 재해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022년 20건에 불과했던 고수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건수가 2023년 107건, 2024년 8월 기준 136건으로 3년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4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2022년 5건(청

구건수 20건), 2023년 22건(청구건수 107건), 2024년 41건(청구건수 136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20.6~30.1%로 조사됐다. 이는 어가들이 재해보험 납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장 금액을 낮게 책정해 가입하거나 피해 발생 때 받는 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가입한 데 따른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지속가능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재해보험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교직원 상습추행 中 행정실장 항소심도 실형

법원, 징역 1년→8개월로 감형

중학교 행정실장 근무 당시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2022년 여수시 일대 술집에서 여성 교직원 3명을 1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직원들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졌고 속칭 ‘리브샷’이라는 행위를 강요하며 추행했다. 또 여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양손으로 움켜쥐기도 했다.

피해 교직원들은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웠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으로 해임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인재영 기자

한국전쟁 당시 총살당한 기자 유족 손배소 승소

법원 “국가가 3억8천만원 지급하라”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 관련자로 몰려 총살당한 기자의 유족들이 손배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전쟁 당시 군인에게 살해당한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총 3억8천만원을 산정,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동광신문과 호남신문사 기자(부장)였던 A씨는 1951년 2월 11일 광주 자택에서 군인 2명과 문관 2명에게 연행돼 화순군 이십곡리에 있는 큰정굴에서 총살당했다. 당시 나이는 33세였다. A씨의 가족들은 그가 사망한 지 7년

이 지나서야 돌무더기 속에 가매장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A씨 살해에 관련한 죄로 문관 2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1952년 재판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군인들에게 ‘공산당의 거두’로 지목받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에 대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결론 내고 지난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쟁이라는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군인들이 A씨를 공산당의 거두로 지목하고 계획적으로 체포, 살해했다”며 “A씨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명백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인재영 기자

‘2명 사상’ 뺑소니 30대 음주정황 발견 광주 서부경찰, 출국 금지 명령 신청

오토바이를 차로 진두포주한 운전자가 사고전술을 마셨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이틀째 추적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을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20)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그가 대전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고 해외도주 우려 등에 출국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또 A씨가 사고 전 광주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을 CCTV를 통해 확인, 음주운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주성학 기자



도심 악취 주범 은행 열매 수거 25일 오후 광주 남구청 관계자들이 관내 월산동 한 도로에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동 수확기로 은행열매를 털어 수거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5·18재단, 전 특전사령부 보안반장 초청 집담회 개최

내달 2일...김충립 목사 “신군부 비자금 조사 입법 절차 검토 필요”

1980년 당시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을 맡았던 김충립 목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서 신군부 세력의 움직임에 얘기하는 집담회를 갖는다. 2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김충립 목사 초청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담회는 1980년 전후 신군부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전두환 회고록’에 북한군 침투설을 기록한 민정

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이를 주도한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광수설’을 주장한 지만원과 배후세력을 밝히는 자리다. 또한 ‘제5공화국’ 기획자인 허 이사장 등에 대한 비판과 대국민 사과 공개 요청, 허 이사장이 착복한 사유 재산(약 700억 추정) 환수 청원 등을 위한 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에는 이 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달 30일 광주경

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허 이사장을 황령·명의도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최근 노태우의 딸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비자금 재산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신군부 직계가족들이 여전히 부정 축재 은닉 재산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부당한 권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철저히 환수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보상에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